

“그래도 올려야” vs “이번엔 동결”... 최저임금 팽팽

광주서 열린 '호남권 최저임금 토론회' 가보니

노측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삶 보장해 달라” 사측 “지역기업 여건 취약... 인상 부담 커 속도 조절 필요”

“노동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순종대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이후형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장)

노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갈렸다. 18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2020년 호남권 최저임금 토론회'는 첨예하게 갈린 노사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들은 이날 2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명확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례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바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직접 광주를 찾아 좌장을 맡아 노·사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조선대 윤상용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는 기업경쟁력 증대·근로자 생산성 향상·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층 힘들다, 최저임금 올려라”=노동계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관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지역 기업들의 임금협상 결과가 ‘동결’ 위주로 진행중이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종대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은 “IMF때인 1998년에는 6.1%, 1999년은 2.7% 최저임금이 올랐다”면서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열어준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정찬호 광주시 비정규직센터 센터장은 “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단축, 휴게시간 약용 등 사용자들의 각종 편법을 막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상은 치명타, 속도조절 필요”=사측 대표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인상 폭과 인상의 속도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형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장은 “최저 임금 인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과 연계해 보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취약한 지역 기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영수 티디 글로벌 대표이사는 “광주

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원정 제조업체가 거의 없다”면서 “임금 상승의 부담감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장년층이 피해를 보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승춘 공인노무사도 거들었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은 서비스업이 85%, 제조업이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결정력이 있는 원정 기업은 없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선 일자리 안정 지원금 같은 정부 정책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간 버티내기에는 버겁다”고 말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문 공인노무사의 제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정책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이날 나온 의견을 빠뜨리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택시·견인차 등 법규 위반 집중 단속

광주경찰 29일~7월12일

경찰이 버스·택시·견인차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보행자 보호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외 버스, 택시, 화물차, 렌터카, 견인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사업용 자동차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53건(2017년)→1390건(2018년)→1404건(2019년) 등으로, 택시의 경우 지난해 966건(법인 773건·개인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버스 222건(시내 164건·시외 23건·전세 35건), 화물 158건 등의 순이었다.

이 때문인지 시민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해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준법·안전운행 준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망자는 2017년 33명에서 17명(2018년), 8명(2019년), 3명(2020년 6월 현재)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경찰은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뿐 아니라 함께 광주·교통안전공단과 협업체도 홍보·교육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차선 좁아진 구간에서

차량 충돌사고...3명 부상

18일 새벽 1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A(43)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과 마주오던 B(56)씨 택시가 충돌했다.

사고로 양 차량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지하철 공사로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모르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고 지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임시로 차선이 변경돼 1개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라임 사태’ 관련 광주MBC 전 사장 체포

김봉현 회장 정치권 연결 의혹
광주MBC 전 사장을 지냈던 스타모빌리티 대표 A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A씨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오전 8시께 A씨를 체포해 김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광주MBC에서 기자로 입사, 보도국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고 대

표이사직을 물러난 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스타모빌리티 부부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를 맡았다.

A씨는 건축자재 관련 사업을 하던 김 회장과 알고 지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정관계 인사들과 필리핀 클락으로 여행을 갔을 때 당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임기를 마친 B의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C의원, 여당 후보로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낙선한 D씨,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E씨 등과 동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때 김 회장이 리조트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회장은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 부산·경남이 지역구인 F 전 의원 등과도 A씨를 통해 접촉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임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거래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당시 정부위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G의원 등과 만나 라임 사태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사 18일 광주 북구청 옥상 냉각탑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냉각탑수를 채수통에 담고 있다. 북구는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냉각탑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레지오넬라균 검사의뢰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년간 7000건 넘는 112 신고 해놓고 형량 무겁다니... 항소심 재판부 “이유없다”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선고

악성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刑)인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하루 4시간 동

안 96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수천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 수사력 낭비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

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스스로 치료 의지가 약하고 동거가족도 없어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만 자민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료 보금
- 저금리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저리저금리 대출 (신용평가)
- 저금리 소상공인 경영개발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